



# 광남일보



조간 제799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음력 11월 3일)

##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 내나

대전·충남 내년 지선서 통합 단체장 선출 지원 밝혀  
광역연합 출범 단계 광주·전남, 행정통합여론 ‘술술’  
정준호,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단일화 특별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단일화 선출 여론도 나오면서 행정통합이 선거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충남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뽐낼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그동안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한 지원도 없다’던 정부의 기조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5국 3특’ 등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전·충남을 필두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전남지역도 행정통합만 결정한다면,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에서는 기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연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자치단체인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특별광역연합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변경 규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의회도 이를 반영해 지난 19일 최종 규약을 확정했다.

확정된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 사무 개시일을 당초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안부 승인과 고시,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 연합 의회 구성, 연합 조

례·규칙 제정, 사무공간 마련 등 출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약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지만, 실무 준비와 출범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도의회에서 규약안이 최종 처리됨에 따라 시와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승인 및 고시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달 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광역연합은 내년 2월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연합은 정부의 ‘5국 3특’ 초광역권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 상생 발전의 핵심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역연합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시민들의 인식과 수용 수준, 정책에 대한 기대 및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71.7%가 찬성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달 10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와 경제난 극복 해법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카드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나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전남지역 통합 단체장 선출도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주 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완성했다”며 “광주와 전남의 광역단체장을 단일화하는 완전한 행정통합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i@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특별강연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김민석 총리 “AI·우주·에너지 중심지는 전남”

전남서 K-국정설명회...국립의대·RE100 국가산단 당위성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을 찾아 “대한민국 AI·우주·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전남이 충분한 당위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열린 국정설명회에서다. 전남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해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휴일임에도 도민 10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K-국정설명회’는 김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 현안과 국가 정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총리는 강연에서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말이 상징하듯 전남은 그 자체로 국가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AI, 우주,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키워갈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발전이 더딘 곳일수록 국가 정책과 예산이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설립을 비롯한 전남 핵심 현안이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립과 함께 이뤄낸 국민주권 K-민주주의의 △외교 기조 △투명한 경제 질서 △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K-문화국가 실현 등 향후 국정 운영의 큰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국무총리가 직접 전남을 찾아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과 소통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민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농수산업 중심지 전남의 위상 강화를 위한 농업·수협 분사 이전 건의에 대해 김 총리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흐름 속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과정에 농·수협 분사 이전도 포함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남이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출생기본소득의 국가 제도화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 발전 차원에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남도는 이번 국정설명회를 계기로 AI·우주·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과 지역 현안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i@gwangnam.co.kr

국가 AI컴퓨팅 센터와 해상풍력 등 전남 2개 프로젝트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

150조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선정

## AI컴퓨팅 센터·전남 해상풍력 등 7곳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차 투자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 풍력 △K-엔비디아 육성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

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